

‘고인물’ 발언에 도의원-시의원 언쟁

시민단체 단속 필요 강조 황대호 “시민단체 매도” 배지환 “편가르기 그만”

수원시의원이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관련해 ‘고인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황대호 경기도의회 도의원은 해당 수원시의원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배지환 수원시의원의원은 제375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을 향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에 대해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라고 말하며 단속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는 지난 16일 항의 집회를 열고 배지환 수원시의원의 발언을 추궁했다.

해당 일과 관련 황대호 의원은 지난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한 의원이 시정질의 과정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추진하는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에 막말을 쏟아 부었다”며 “이는 시민단체를 매도하고 지방정부가 가진 권한과 사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매우 위험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화성시민은 대규모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행복권·학습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전투기 추락 사고는 인구밀집 지역인 군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항상 공포와 불안 속에

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수원시 국민의힘은 자당의 공약사업인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와 관련해 소속 의원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 대해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제는 경기도와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 하나가 돼 힘과 지혜를 모아내야 한다.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26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편가르기”라고 단언했다.

배 의원은 “먼저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의 시민단체를 향한 막말이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대표기관이자 독립기관인 시의원으로서 제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시정질

문을 한 것이 어떻게 저를 제외한 19명의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막말이 되나”며 “개인의 의정활동에 정당색을 입히는 색깔론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는 국민의힘만의 공약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라며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을 간절히 소망하는 경기도민이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 의원의께서는 편가르기를 멈추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론 채택에 힘써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배 의원은 “황 의원 말의 진정성을 믿기에 공개토론 제안을 환영한다”며 황 의원과 차후 공개토론에 응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김인창·김희열 기자



인천시의회와 베트남 호치민시·호이안시가 우호 교류 증진 및 아시아 상생·번영·경제·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미래지향적 교류를 서로 약속했다. (사진=인천시의회)

호치민·호이안시와 우호 교류 협력 강화

인천시의회, 한국-베트남 발전과 아시아 번영 노력

인천시의회와 베트남 호치민시·호이안시가 우호 교류 증진 및 아시아 상생·번영·경제·문화·관광 활성화 강화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교류를 서로 약속했다.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신동섭·박관순·장성숙·나상길·이명규·이순학 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간의 일정으로 인천시와 호치민시·호이안시 간 우호 교류 증진 및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다.

방문은 △호치민시인민의회와 교류 행사를 통한 협력 관계 증진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와 인천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교류 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현지 시찰 △호이안시 유네스코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 활성화 정책연구 △베트남 교민사회 주요 기관 방문 및 양 도시 교류 협력 사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호치민시인민의회를 찾아 양 도시 의회 간 상호 협력 관계 증진을 활발히 함이었다.

대표단은 지난 23일 호치민시에서 호치민시인민의회 응웬 반 지용 부의장과 만나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 의회는 지난 2017년 우호 교류도시의회 협정 후 교류해 오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 9월 협정 5주년을 맞아 호치민시인민의회가 인천을 방문한 바 있다. 이번 시의회 대표단 방문은 호치민시인민

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한국 기업인·관광객들에 대한 베트남 비자 규제 완화 협력과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소급 입법 완화 협조, 호치민 한인 문화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또 신동섭 의원은 인현대 등 인천지역 내 대학들과 유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정책도 협력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응웬 반 지용 부의장은 “호치민에 있는 많은 한국의 기업·교민들은 호치민 발전의 원동력이다. 한·베 관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5일 팡남성 호이안시청에서 호이안시인민위원회 응우옌 민 리 부위원장 및 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난 대표단은 양 도시 간 경제·문화·관광 분야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허식 의장은 “인천은 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 항구도시이면서 최근 750만 제의동포들을 관리하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도시로 앞으로 학생이나 한·베 가정 자녀 등 호이안 시민의 유학이나 방문이 더 많아질 바라다”며 “이런 교류들이 많아진다면 분명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응우옌 민 리 부위원장도 “호이안시는 고대도시의 보존·보호·복원·가치 발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ODA나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번 첫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협력 교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인종삼 기자

영종국제도시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배준영 의원,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면담 “인천은 반도체 산업 최적지”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이 국가 첨단전략사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국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향후 국가의 먹거리가 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역시 지난 2월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올 6~7월께 발표 예정이다.

인천시는 영종국제도시에 반도체 패키징 관련 기업을 유치, 글로벌 진출 거점으로 조성하는 한편 송도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각각 첨단 패키징 R&D 및 인력양성 단지화 ‘반도



배준영(오른쪽) 의원이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과 국회의원회관에서 면담을 갖고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이 국가 첨단전략사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배준영 의원실)

체 첨단패키징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인천을 ‘반도체 첨단패키징’ 1등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배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인천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 세계 2·3위 기업이 위치해 있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전체 수출액의 32%를 차지하는 반도체 특화 지역”이라며 “자체 공장과 항만을 보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영준 실장은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의 기준은 지역의 인프라와 산업생태계가 얼마나 첨단기술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렇게 큰 관심을 두고 말씀해 주신만큼 평가위원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 2월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인천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필요성을 주장해 소위 통과를 이끌어냈다.

면담을 마친 배 의원은 “인천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촉구하고자 현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2차 면담을 조율중”이라며 “최적의 입지조건을 보유한 인천시(영종국제도시)가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시와 적극 협의해 대한민국 반도체 성장 동력으로

가 결정돼야 한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2021년 전당대회’ 불투명 의혹 사건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상만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유투표 하기로 들었다”면서도 “객관적인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

“김남국, 근본적으로 의원자격이 문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장 “국민에 큰 실망 줬다”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윤리심판위원장은 29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논의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좀 문제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경우에 따라 김 의원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회의원들도 국민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리심판위원장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투자했다거나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

가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2021년 전당대회’ 불투명 의혹 사건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이상만 의원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과 관련해서는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 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유투표 하기로 들었다”면서도 “객관적인 돈봉투 사건의 실체가 자

료로 확인된 것으로 설명이 된다면 엄정하게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 ‘개팔’(개혁의 팔)이 자신에게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한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에 대해 일부 당원들이 징계 청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 관계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안산시 직접 제수문 관리를 시의회 본오들 특위 보고회

안산시 본오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가 직접 제수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안산시의회 ‘본오들 침수 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그동안 활동 사항을 정리하는 활동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상록구 본오들 등지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해 9월 구성된 특위는 그간 총 6회에 이르는

현장활동과 3회의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작업을 착실히 수행해 왔으며, 이번 보고회에서 그 결과물을 공개했다.

보고회에서 특위는 지난 9개월간 활동한 결론으로 △반월천 제수문 및 갈대습지 미개방구역 관리권 확보와 △세계정원 경기가든의 토사유출로부터 갈대습지의 수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안산시 재난 대응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본오들 농배수로관 교체 및 법면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등 4개의 주문사항을 제시했다. 김승수 기자

학교 기시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민주당, 안양·안산·시흥) 의원은 교육청노조 연맹은 25일 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불합리한 학교 기시설비유지관리자 상시 채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기시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기시설비법’을 제정하고 2020년부터 시행했다. ‘기시설비법’에 따르면 기시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기시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과 달리 ‘기시설비법’ 시행규칙의 비교란에 1건물 당 1명의 기시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이는 위탁이 불가능한 구조로 법의 취지를 왜



곡해 시행규칙이 만든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학교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전국 학교 가운데 연 면적 1만㎡ 이상인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교 수는 무려 4536개이다. 해당 학교들은 기시설비유지관리자를 위탁할 수 없고, 상주 직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2024년 4월부터는 연 면적 1만㎡ 이하 학교까지 적용되면 실제 전국의 1만 2203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정용표 기자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영석 의원

서영석(민주당, 부천정·사천) 의원이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자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중 18세 미만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은 7만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 3944명)의 1.04%인데,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들 볼 기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성열 기자

어린이시설 취업제한·신고의무 대상 확대

김승원 의원

김승원(민주당, 수원갑·사천) 의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아동학대 정황을 신속하게 발견, 신고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보건소 이용 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0만 5379건, 11만8996건, 10만7994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대상사례 신고 중 의료인·의료기사의 신고접수 건수는 549으로 신고의무자 유형 중 5위에 자리했다.

이에 반해 현행법은 보건소·보건지



소 등의 지역보건 의료기관이나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 지역 아동에게 필수적인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고 아동학대관련 범죄자가 보건소·보건진료소 등의 기관이나 키즈카페 등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열 기자